

박 대통령, 일방적 개각 단행... 정국혼란에 '기름'

김병준 국무총리 임명에 야권 "받아들일 수 없다" 혼란 속 도내에선 정권 퇴진 1만인 서명운동 돌입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 등 전격적인 개각을 단행하면서 정국이 더 큰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야권은 즉각 반발하며 총리 인선을 거부키로 하면서 '최순실게이트'로 인한 진상규명이 정국혼란에 뒤따르는 모습이다.

여야 정치권은 2일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임명 소식을 듣고 "뒷통수를 맞았다"는 분노에 찬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일제히 "박 대통령이 아직도 정권을 못차렸다"며 김병준 총리 카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차 최순실 내각을 만드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겸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더 큰 탄핵 하야 촉발을 유발시키게 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게이트'로 코너에 몰리며 급격하게 국정동력을 상실하자 정국의 중심축은 탄핵 등 박 대통령 책임 규명보다 거국내각 구성 등 국회가 국정 운영 주도하는 방안으로 쏠리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하지만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두

고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번복하고 국민의당과 옥신각신하며 박 대통령으로 집중해야 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 지도부 해산에 머뭇거리다가 박 대통령의 독주를 방관하는 꼴이 됐다.

야당은 1차적으로 총리 임명을 저지시켜 박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인사청문회까지도 가지 않도록 청와대가 총리 지명을 철회하거나 지명자가 자진사퇴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 역시 총리 임명을 있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어서 김병준 '총리 카드'는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회가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수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여전히 탄핵 주장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흘러나온다. 국회 구성 상 야당만으로는 탄핵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역풍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애초에 당이 특검과 거국내각에 대해 일



분노의 돌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굴착기를 몰고 돌진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모(4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중징비 관

현업을 하는 정씨는 근무지인 전북 순창에서 이날 새벽 3시께부터 대형트럭에 포크레인을 싣고 청사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조사과정에서 "최순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으니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시선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포크레인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는 모습.

관되지 못한 태도로 스웨를 꼬이게 한 면이 있다"면서 "국회 안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셈이어서 결국 국회 밖으로 나가 탄핵과 하야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주도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탄핵이나 하야 요구를 외면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 권력의 공백 속에 정치권은 총리 자리에 아웅다웅하는 모습으로 흘러간 면이 있다"며 "박 대통령이 국회의 이 같은 부분을 노려 국정 주도권을 끝까지 쥐고 가려하지만 이는 국민들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전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북 도민들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날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을 농단한 박 대통령은 즉각 자리에서 내려와서 최순실과 함께 엄중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에 우리는 지난 27일부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각 정당은 더 이상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별도의 특검을 실시해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며 "탄핵 정치권이 무사안일하게 이번 사태에 대응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1만명을 목표로 계속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촛불집회 참여와 1인 시위, 현수막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고민형 기자

산지쌀값이 80kg 기준 13만원대가 무너지면서 변동지불금이 부족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지쌀값 조사치는 20kg 조곡 기준 3만2,407원, 80kg 기준으로 환산하면 12만9,628원이다.

지난해 동기 15만4,132원과 비교하면 2만4,504원(15.9%)이 떨어진 것이고, 올 단경기 평균 13만9,809원보다도 7.3%가량 하락한 것이다.

특히 올 단경기 가격이 전년 수확기 대비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인 역계절전락을 나타냈었다는 점과 신곡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수확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추락하는 쌀값, 날개가 없다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산지 농민들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산지가격이 13만원대가 무너지면서 변동지불금 지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당초 산지쌀값이 14만3,789원인 경우를 가정해 내년도 변동지불금 예산 9,777억원 가량을 세웠다. 이어 산지쌀값이 하락하더라도 국회 예산 검토과정에서 변동지불금 예산을 상향해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산지쌀값이 13만원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1조4,900억원이라는 허용보조 내에서 변동지불금을 충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상향으로 변동지불금이 모자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당국도 변동지불금이 모자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확이 피해가 예상보다 많이 집계됐고, 등숙기 일기 불순으로 인해 실제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관

80kg 기준 12만9628억원
평균보다 7.3% 가량 하락

측과 함께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 그리고 농협RPC의 재고량 일부에 대해서도 격리조치를 취했지만 산지쌀값은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25만톤에 대한 시장격리가 진행되고, 공공비축미를 비롯해 해외공여용 쌀에 대한 격리, 그리고 2015년 산 구곡에 대한 격리와 타용도 전환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서는 반응이 없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변동지불금 지급과 관련, 산지 농민들도 불안한기 마찬가지다.

수확기 농협의 벼 매입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쌀값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산지 농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데다가,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민간RPC들은 당장 필요한 량의 조곡만 매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의 한 농민은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정부가 변동지불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겠느냐"면서 "변동지불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줄어들고, 제한을 하락으로 등급도 낮아지기 때문에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인재용 기자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일 오후 2시30분께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16회 국무총리배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도아리 경진대회

KOREA YOUTH CLUB COMPETITION

11월 12일 전북대학교

- ▶ 주최: 여성가족부, 전북대학교
- ▶ 주관: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 JTV 전주방송
- ▶ 후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광역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 참가대상: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및 청소년시설 청소년동아리
- ▶ 참가비: 무료

교육부 여성가족부 전북대학교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라북도연맹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JTV 전주방송 전주매일신문